

신자유주의적 탈공산주의 이행전략 비판

林 昶 勳 (서울대)

I. 머리말

어느덧 동구권에서 탈공산주의 이행이 시작된 지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였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탈공산주의 이행 전략에 관한 논쟁은 정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분법적 — 예를 들어,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 국가와 시장,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경제개혁, 미래에 대한 분홍빛 청사진과 체결되어야 할 과거로부터의 유산 등 — 대립구도를 만들어냈다. 논쟁이 이러한 양상을 띤 이유는 탈공산주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확실성에 대한 반발 또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¹⁾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전략 자체가 이러한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인위적 이분법을 지양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 스타크(David Stark) 등에 의해 축적되어 온 탈공산주의 이행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쉘보르스키(Adam Przeworski), 헬만(Joel S. Hellman) 등에 의해 제기된 사회민주주의적 혹은 참여민주주의적 개혁전략은 그 대표적 예들이다. 아울러, 쉬미터나 쉘보르스키 등의 비교 민주화 이행론(Transitology)에 대한 비판을 통해 축적된 번스(Valerie Bunce)의 연구도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론적 정향이 서로 다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대립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

1)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대한 반론 중에서, 탈공산주의 이행이 과거로부터의 유산에 의해 이미 운명지워졌다거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강력한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Buroway; Stark and Bruszt, pp.5-7 참조)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은 공통적으로 탈공산주의 이행이 지닌 복잡성에 유의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실현가능한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접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탈공산주의 이행에 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주요 논리를 재구성한다. 제 3절에서는 경로의존성, 제도들간의 상호보완성, 사회적 배태성(embeddedness) 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탈공산주의 이행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단선적 진화론을 비판한다. 제4절에서는 협의적, 참여적 개혁론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민주주의와 경제개혁 양립불가능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제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다.

II.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논리

신자유주의적 급진개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사회적 맥락에 관계없이 보편적 청사진을 급진적으로 적용한다. 신자유주의적 개혁론이 그 기초로 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어느 사회나 자원 배분의 (정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상적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비롯한 경쟁적 시장 제도들이 인위적으로라도 일단 창출되면 합리적 경제 주체들이 시장의 유인구조에 맞추어 자신들의 행태를 빠른 시간 내에 변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이행 경로를 상정하고, 소위 '디자인에 따른 자본주의', '모방에 의한 이행'을 요구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안정화, 자유화, 사유화, 구조조정, 시장제도들의 발전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비교적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안정화와 자유화 조치들 뿐이며, 여타의 제도적 진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기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 개혁론자들은 철저한 안정화 정책, 포괄적인 자유화 조치들, 대규모 사유화 및 제반 법적 조치들을 동시적으로 실행하려 한다. 이 '충격요법'은 설사 개혁 초기에는 자원배분 상태가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작용은 추후에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교섭, 즉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단일하고도 보편적인 이행경로를 통해 완전시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전주의적 처방에 저항하거나 신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로 간주된다. 즉, 공산주의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제도적 장애들이나 사회적 반발은 이행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 즉 효율성을 저해하는 마찰요인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신속히 와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둘째, 신자유주의 개혁 전략은 과거로부터의 유산과 사회적 맥락을 불신하거나 무시하고, 그 대신 시장과 국가 중 어느 하나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시장 사이의 대척적인 관계를 상징하면서도 이 양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신고전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시장과 국가라는 이원적 기제—그라노벤테(Mark Granovetter)의 표현을 빌자면, 원자화, 저사회화된 시장과 과사회화된 리바이어던적 국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들에서 국가와 시장 이외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은 실종되어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란 과거에 확장되었던 국가를 급격히 축소시키기만 하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고전주의적 처방은 강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한다. 이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거로부터의 제도적 유산이나 사회의 특수 이익으로 인해 개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설은 원자화된 사회에 대한 관리(governance) 기제를 오직 시장 또는 국가에서 찾는 신고전주의적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즉, 새로 도입되는 시장기제는 아직 걸음마 상태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에 대한 관리(governance) 기제를 축소되어야만 할, 구체제 붕괴에 따라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진 국가에서 다시 찾고 있는 셈이다.

셋째, 과거 및 사회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국가역할에 대한 이러한 역설적 이해는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에 대한 양립불가능론을 제기한다. 신자유주의적 개혁론자들에 따르면, 자신들의 처방 자체는 옳은 것이며 문제는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만 하면 될 일인데, 과거의 제도적 관성이나 민주적 정치과정이 이

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개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결정 과정을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절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권위주의적인 방식, 즉 포고령주의(decretism)나 위임통치령(mandatism)에 의한 기술관료적 개혁 스타일을 선호한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으로 이해하면서도 양자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아, 이행국면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보다 경제개혁에 우선성을 부여한다.

넷째, 시장에서의 경쟁이 원자화된 행위자들 사이의 적자생존을 결정한다는 효율성에 대한 단선적 진화론에 입각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개별화되고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형태만으로 구성된 시장경제를 창출하려 한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에서는 획일적 양태의 시장 행위자들만 존재하게 된다.

본래 왈라스 균형의 보편성에 의거하는 고전주의 경제학은 자원배분을 위한 제도로서는 시장에서의 가격 메카니즘만을 고려하였고, 기업 내의 자원 배분 메카니즘은 블랙박스로만 간주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중대한 수정은 코스(Coase, 1937)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코스는 왜 모든 생산 요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간주되는 가격 메카니즘에 의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조직인 기업에 의해 결합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은 위계조직(hierarchy) 하에서 자원배분을 한다는 점에서 가격 메카니즘과는 별개의 자원배분 메카니즘이다. “거래비용의 경제학”의 선구를 이룬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과 위계조직(기업)이라는 오직 두 종류의 경제조직만이 최적화 메카니즘인데, 수행되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시장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안적 제도 중의 하나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거래들을 수직적으로 내면화 한 독립적 기업조직이 최적의, 가장 발전된 기업 형태이다(Williamson, 1975). 이러한 이론은 근대기업이 기술의 진보와 소비자 수요의 증가의 결과로 “다부문 기업(소위 M-form)”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찬들러(Alfred Chandler, Jr.)의 미국 기업의 진화에 관한 기능주의적 설명을 뒷받침한다. 여타의 조직양태들—대표적 예로, 연결망(network)이나 기업집단(business group)—은 과도적이거나 효율성과 관련하여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과거 기업 형태의 존속과 효율성 또는 혁신 사이에 가공의 이분법을 설정하고, 과거 기업조직 형태의 존속을 비효율성, 즉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로 간주한다.

이상과 같은 논리 구조를 지닌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 청사진대로 실현된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없다. 완전경쟁시장은 물론, 역사상 그 어느 시장경제도 단시일 내에 창조된 예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 여부이다. 사실 이행 초기에 충격요법이 선택된 경우들에서조차도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치들이 의도대로 관철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제도적 유산이나 사회세력들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의 처방이 지닌 건실성, 일관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건실한 전략이란 개혁의 비용이나 반발로 인해 과연 개혁이 계속 지지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Pereira, Maravall and Przeworski, p.8).

개혁 초기에 충격요법이 선택된 경우들에서조차 신고전주의적 청사진이 의도대로 관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하여 진공상태 속에서 탈공산주의 이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적 가정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하는 미국의 시장경제도 장기간에 걸쳐, 그것도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에 의거했다기보다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탈공산사회에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했던 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남긴 제도적 유산들로 인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나 기업조직, 사회적 제도,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사이의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시장경제의 정치적, 사회적 구성과정을 무시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청사진은 이러한 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사실, 동구 몇 나라에서의 성공적 이행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공로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초기에 충격요법이 선택되고서도 후속 조치들이 의

도대로 관철되지 않은 경우들에는 개혁이 실패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행이 상대적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도 포함된다. 폴란드는 초기의 정통적 안정화 조치 이후에는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취하였으며, 사유화 조치는 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체코에서는 급진적 사유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도 국가가 광범위하게 기업 소유권에 관여되어 있고, 클라우스(Vaclav Klaus) 수상의 신자유주의적 발언들과는 달리 사실상 반실업, 반파산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다. 또 다른 우등생이라는 헝가리에서는 아예 이행 초기부터 공산시절의 개혁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점진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들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내용, 순서, 속도 등이 타협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급진적 처방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실용적 정책들을 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Ⅲ. 단선적 진화론 비판

신자유주의적 개혁론이 단선적, 보편적 이행경로를 상정한 것과는 달리, 실제 탈공산 시장경제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진화과정의 다양성은, 국가들마다 다르게 채택된 사유화 방식들, 그 결과 초래된 다양한 기업지배구조들, 각 사회마다 그 제도적 유산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의 연결망들이 시장의 지배적 행위자로 재등장한 사실 등에 의해 생생히 보여지고 있다.

먼저, 탈공산사회들에서의 사유화를 살펴보면, 스타크(David Stark, 1994)가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의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했듯이, 사유화 방식들은 공산주의로부터 ‘탈출경로’(path of extrication)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²⁾ 동독의 흡수통일은 신탁청에 의한 중앙집권적 사유화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행복은 바우처의 유상 분배를 매개로 한 중앙집권화된 사유화로,

2) 그러나, “경로의존”의 개념은 이념화된 개념으로서, 이 개념을 현실 분석에 직접 적용하려 할 때 지나친 단순화나 포괄적 구조결정론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의존적 경로형성”(path-dependent path-shaping: Nielsen, Jessop and Hausner, 1995)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는 임경훈(1997) 참조.

폴란드에서의 타협에 의한 이행은 바우처의 무상 분배를 통한 사유화로, 헝가리에서의 경쟁적 선거는 분권화되고 점진적인 사유화로 귀결되었다.

영·미식 신고전주의적 시장경제를 급진적,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는 의도로 동일하게 바우처 사유화를 택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사유화가 지연되거나(폴란드), ‘내부자 지배형’(러시아) 또는 ‘외부자 지배형’(체코)이라는 상이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경로의존의 서로 다른 양태와 정도(예를 들어, 공산주의 시기에 진행된 자생적 사유화의 정도, 사회적, 정치적 저항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시장의 태생적 취약성, 여전한 남아 있는 국가 소유권 문제 등은 주식 시장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영미식 지배 구조 모델의 성장을 제약하는 공통적 요인들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원자화되어 있는 행위자(개인 또는 기업)들로 시장경제가 구성된다고 가정하는 신고전주의적 처방과 달리, 사유화 이후 동구 국가들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다양한 양태의 기업간 연결망이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사실, 원자화된 개별 행위자를 경제 행위의 기초 단위로 보는 견해는 경쟁적 개인주의의 전통을 지닌 서구의 극히 일부 사회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일종의 문화중심주의이다. 더구나, 경쟁적 개인주의가 정착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난 근대기업으로의 수직적 통합조차도 효율성의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 또는 단순한 모방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의 많은 사회들(부분적으로는 미국 경제에서조차)에서는 그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이 시장경제의 중심적 행위자이다(Orru, Biggart, Hamilton). 즉, 시장경제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은 서로 연계된 존재들인바, 경제 행위의 기초 단위는 원자화된 개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embedded) 있는 연결망인 것이다.

점진적, 개별적 매각에 의한 사유화를 실시한 헝가리에서는 기업들이 상호 지분 소유를 통하여 직·간접적, 수직·수평적 연결망으로 재조합되고 있다. 지배인들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된 기업이나 위성 기업들을 설립하여 왔는데, 이들은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되어 있으나, 민간, 반민간, 국가 등의 소유 주체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소유주체나 기업간의 조직경계는 매우 불분명하여, 시장과 위계조직이라는 이분법으로는 그 속성을 포착하

기 힘들다. 체코나 러시아에서는 바우처 사유화를 통해 소유권을 분산시킨 영미식 모델을 급진적으로 창출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의도와 달리, 투자 펀드가 아니라 은행이 금융시장의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지분 소유 및 소유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사실은 헝가리에서 기업 연결망이 은행 또는 투자회사에 의해 매개되기보다는 기업 자신들 간에 형성된 것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체코의 경우, 공산주의 시절에는 대체로 기업들 사이의 수평적 연결망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지배인들의 자율성이 있었고, 일부 산업과 지역들에서 중간 수준의 산업연합체(meso-level industrial association)들이 존재해 왔다. 클라우스 수상은 신자유주의적 수사학을 구사하면서도, 이들 연결망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된 금융, 투자회사들 사이의 상호지분 소유에 의해 기업들이 연결되기에 이르렀다(Stark and Bruszt). 또한, 소위 금융-산업 그룹들(financial-industrial groups: 이들 그룹은 크게 은행주도형 금융-산업 그룹과 산업주도형 금융-산업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 경훈 1999 참조)에서 극명히 나타나듯이 러시아 시장경제도 독립적 개체로서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일련의 기업, 은행, 정치권력으로 이루어진 연결망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제도적 유산들은 신고전주의자들의 단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기는커녕 매우 강력하게 남아 있고 '재조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행위자들로 경쟁시장이 이루어진다는 신고전주의적 가정 아래 시행된 개혁 조치들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근거 중 하나로서, 급진적인 개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문제를 비롯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경로의존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들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들간의 거래비용을 부분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이 반드시 합리적 계산에 의해 선택되거나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탈공산주의 기업 조직의 일차적 목표는 '생존'인데, 생존은 내부 효율의 극대화로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특히, 제도화 이전의 신생 조직은 제도적 환경과 구성원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그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후발국에서와 같이 고도로 기술지배적 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기업 조직은

효율성보다는 대내외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성을 감수하기까지 한다(이 재열, pp.92-98, 211-14). 즉, 조직의 양태는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만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socially constructed). 이와 유사하게, 탈공산주의 사회들에서의 기업간 연결망들의 재등장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과거로부터의 물려받은 관계들의 관성,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압력 하에서 소유권이 재결합, 재구성되고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결망들이 반드시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다. 탈공산사회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연결망들은 불확실성과 충격이라는 조건 하에서 상호교차 소유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완충기의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위 ‘붉은 기업 지배인’들을 부정적으로만 파악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 지배인들의 자율성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Brada and Singh). 물론, 이러한 주장이 과거의 연결망을 긍정적으로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러시아의 경우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이들 연결망들은 지대추구의 온상이기도 하며 기업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결망들의 존속이나 재생산을 비효율성의 징후로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그라버와 스타크(Gernot Grabher and David Stark)가 지적하고 있듯이, 다양한 진화 경로를 지닌 다양한 수준의 효율성이 곧 비효율적 선택기제의 증후는 아니며, 또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해결방안이 곧 진화상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특정 환경에 최적으로 적응된 개체들로만 한 종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집단의 장기적 생존은 그만큼 환경의 변화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배분적 또는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장기적 효율성이 맞교환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변이는 나름대로의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이나 미리 정해진 처방에 신속히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또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을 단순히 실패나 제도적 마찰요인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마찰요인들은 행위나 조직 형태의 다양한 대안들을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생존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장경쟁이라는 선택기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장 경쟁으로부터의 완충(buffering)이나

구획분할(compartmentalization)의 유용성을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의 산업지구들의 경험은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질성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로부터 물려 받았고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제도적 자원들은 단순히 이행을 제약하는 방해요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자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연결망들의 야누스적 속성을 포착하고 협의적 개혁 과정 속에서 이들의 석명책임성(釋明責任性: accountability)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적 속성을 무시하고 개별 기업의 재구조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간 연결망의 재구조화이다. 나아가, 이들 연결망들은 단순히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재구조화의 추진자이기도 하다(Grabher and Stark).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사회에 배태된 이러한 관리기제를 무시하고,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인 국가나 시장으로부터만 관리능력을 도출하려고 하지만, 사회적, 제도적 배태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행위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독일 신탁청에서 관료적 결정에 따라 사유화를 시장기제에 맡기어 급속히 추진하였을 때 오히려 막대한 자산이 부채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시장 행위자들과 협의를 통한 개혁으로 선회한 경험, 헝가리에서 기업 부채들에 대해 중앙집권적 처리를 하였을 때 오히려 금융위기가 초래되어 급격히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경험은 기업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적 속성과 제도적 배태성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이었다(Stark and Bruszt).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현실의 미묘한 복잡성은 시장경제에 관한 단선적 진화론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애써 무시되어 왔다.

IV.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경제개혁의 양립불가능론 비판

신자유주의자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이에 친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단기적 관점

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개혁과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에 주목하여,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을 위하여는 경제개혁이 민주적 정치과정으로부터의 절연되어야 하고, 경제개혁의 고통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더라도 그 고평만 넘기면 경제개혁의 성공이 민주정부의 정당성을 고양할 이라는 믿음에서 경제개혁에 우선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논리는 소위 '전환의 계곡'으로 불리우는 J 곡선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에 기초한다. 이 곡선에 따르면, 개혁은 경제 효율성의 개선이나 분배 구조의 변화 등 비교적 영속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사전에 기대되지만, 인플레이션, 실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집합적 비용과 국민들 사이의 상대적 소득의 급격한 변화라는 분배적 비용으로 구성된 과도기적 비용을 지불한다. 문제는 행위자들이 미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과 희망만 믿고 단기적으로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시간의 불일치로 인해 개혁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더구나, 개혁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미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혜택이 현실화되기 전에 개혁이 역전되거나 포기될 것으로 기대하여, 행위자들이 미래의 혜택에 대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더욱 높게 된다. 이러한 시간 불일치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 하에서 행위자들은 개혁을 사전에 거부하거나, 개혁이 시작된 후에는 선거에 의해 사후적으로 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초기에 선택된 급진적 개혁이 점진적 개혁으로 변질되거나, 정통적 개혁보다 비정통적 개혁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J 곡선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교환현상(trade-off)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민주화는 경제개혁의 진행을 방해한다. 민주화로 인한 기대상승과 분배투쟁의 격화는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한다. 더구나, 민주화 이후 제도화된 주기적 선거와 다원적 경쟁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적 스타일이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개혁의 불평등한 충격으로 인해 반민주적 운동이나 제도에 대한 매력 증가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본질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다만, 이러한 전제 하에 어떻게 하면

교환현상의 정도를 완화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개혁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부터 특정한 정치적 전략이 도출된다. 그 전략이란, 개혁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승자들을 조직화하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세력, 즉 소위 '과도기적 패배자들'을 관리(약화 또는 포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혁 과정 중에는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과도기적 패배자들을 관리하는 전략이 보다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전략은 개혁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패배자들, 특히 중단기적 패배자들을 개혁의 위협세력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J 곡선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전략에 대하여 헬만(Joel S. Hellman)의 연구는 중대한 수정을 가하고 있다.³⁾ 그에 따르면, 개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세력은 과도기적 패배자,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받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 사실상 과도기적으로는 손실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반면, 이득은 소수에게 집중되며,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즉, 소수의 과도기적 승자는 집합행동에 유리한 유인구조를 가지는데 반해, 다수로 이루어진 과도기적 패배자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헬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혁 초기의 승리자들이 개혁 초기의 과실은 향유하면서 더 이상의 개혁의 진전을 방해할 가능성이다. 개혁 초기의 승자들은 부문들마다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개혁부분과 미개혁부분을 넘나들면서 지대를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고 더 이상의 개혁의 진전은 방해할 유인을 갖는다. 경제개혁이란 아무리 급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일련의 구성요소들이 시차를 두고 실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결정들은 선거주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의 소수의 승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의 집중성, 풍부한 자원, 집단행동에 유리한 선택적

3)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비판적인 웨보르스키의 연구도 개혁에 대한 반대세력, 특히 과도기적 패배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놓여 있다. 즉, 과도기적 승자의 부정적 역할은 그의 J 곡선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웨보르스키는 과도적 패배자를 관리할 조합주의적 기제의 효과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명하고, 그 대신 대의기구를 통한 협의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Przeworski, 1991, pp.180-187; Pereira, Maravall, and Przeworski, p, 10, pp.208-213), 이러한 해결방식은 헬만의 정치참여 확대 주장과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헬만의 연구는 과도기적 승자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J 곡선에 대한 웨보르스키의 인식을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웨보르스키가 주장한 해결방식이 왜 정당한 지에 대한 적극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인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개혁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공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찰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의 과도기적 패자가 아닌 개혁 초기에 발생할 지대추구형의 승자들을 제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도기적 초기 승자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멘클라투라등의 기득권 세력 중 개혁 국면 초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자들이거나 기득권 세력과 연합한 신흥세력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기득권 세력과 과도기적 승자는 '영원한 승자'로 남고자 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시장지향적 개혁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은 가장 고통받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권력의 독점을 바탕으로 한 시장개입을 통해 지대추구를 해왔던 기득권 세력이다(Geddes). 이들은 개혁에 처음부터 저항하거나 또는 과도기적 승자가 되어 개혁의 완성을 방해한다. 넬슨(Joan M. Nelson, p.57)도 지적하듯이, 개혁이 진행되어 제도적 개혁 국면에 접어들수록, 이들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치적-제도적 개혁,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대추구형 세력의 관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Schmitter and Santiso, 1998, p.81).

이렇게 볼 때, 개혁의 지속은 과도기적 패배자들을 배제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재등장 가능성과 과도기적 승자의 지대추구를 제어할 정치적, 제도적 개혁에 초점이 놓여져야 한다. 이 점은 경제개혁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심화 사이에는 선순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과도기적 패배자를 관리한다는 소극적 전략만으로는 경제개혁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과도기적 패배자들에게로의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수반하는 협의적 개혁이야말로 개혁 과정 초기 승리자들의 지대추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경제개혁을 완성시키는 불가결한 요소로 나타난다. 주기적 선거는 개혁의 진행을 방해한다기보다는 개혁 과정 중에 나타나는 지대추구를 통제할 민의를 표출케 하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효과적 대의기관, 확대된 정치참여와 투명한 사회적 협의는 개혁 초기의 승자나 재등장하는 기득권 세력의 지대추구에 대한 개혁 정부의 양보나 기술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개혁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개혁의 지속을 도울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경제개혁의 양립불가능론은 시민과 사회세력들로 하여금 참여와 협의의 기회를 확대하면 경제개혁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초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포퓰리즘이란 것도 바로 경제개혁을 테크노크라트적 방식으로 수행할 때 나타나는 부산물이며, 소득이 매우 불균등하게 소수에 집중된 결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결합되면서 정통적 개혁과 경제적 포퓰리즘 사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Pereira, Maravall, and Prezeworski, p.10; Sachs, 1988, Pereira, p.55에서 재인용). 요컨대, 기술관료적인 방식이야말로 포퓰리즘의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오히려 경제개혁의 지속을 방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들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걱정은 기우인 경우가 많은데,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할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사전에 수용하거나, 사후에도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개혁의 지속을 공약하는 후보자들에게 투표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양립불가능론은 권위와 석명책임성(accountability) 사이의 교환현상을 가정하여, 사회세력 또는 반대세력과의 협의가 곧 개혁정부의 취약성으로 비추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선거주기가 길고 정치적, 사회적 견제가 적을수록, 개혁이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은 오히려 자의적이고 실행가능하지 않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반대에 직면하여 급격히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우를 범하게 만든다. 이는 곧 개혁의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개혁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결국, 제약되지 않으려는 정부는 오히려 약한 정부가 되고 만다.

물론, 경제 개혁을 실행하는 데는 무한정 민주적으로 심의만 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민주적 과정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개혁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관료적 방법은 경제개혁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여 개혁의 지속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취약한 민주주의마저 위협한다. 공개적 토론을 통해 정치 세력들의 협조를 얻고, 대의기관들을 통해 개혁 전략을 적절히 심의하는 것이 비록 테크노크라트적인 청사진보다는 덜 일관되고 타협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포퓰리즘의 정치적 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개혁의 지속성을 높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경제개혁의 양립 불가능론이나 경제개혁 우선론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 사실,

경험적 연구들도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동구와 구 소연방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보다 진전된 나라들(예를 들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에서 그렇지 못한 구소연방이나 남동 유럽 국가들보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보다 성공적이다. 러시아에서 제약되지 않은 정부에 의한 권위주의적 개혁이 오히려 일관성을 결여하고, 노멘클라투라와 개혁 초기의 승리자들이 개혁 초기의 과실은 향유하면서 더 이상의 개혁의 진전을 방해한 점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이행 초기 첫 선거를 통해 비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개혁이 보다 진전된 곳에서, 제약되지 않는 위임제적 대통령제 국가들보다는 여타의 국가기구나 사회세력들에 의해 견제되고 석명책임성 기제가 상대적으로 잘 작동되는 곳에서, 경제개혁은 오히려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 중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선거에 의해 과거의 공산주의 세력이 재집권했음에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위협받지 않았다. 그리고, 체코에서는 행정부의 권위가 헌법적, 정치적으로 제약되어 비록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타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동구 국가들 중에서 시장지향적 개혁이 상대적으로 가장 순조롭고 일관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Bunce; Fish; Stark and Bruszt).

이와 같이 탈공산권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경제개혁이 양립가능할 뿐 아니라 상호강화 작용을 하는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가 정치와 경제가 융합, 중앙집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공산주의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신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보다 넓게 이해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의 친화성이 존재하며, 둘 중 한 영역에서의 개혁이 다른 영역에서의 개혁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참여적, 협의적 개혁론은 신제도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되는데, 스타크와 브루슈트(Stark and Bruszt)도 강조하듯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협의를 확대하고, 개혁정부에 대한 (선거에 의한) 수직적, (여타 국가 기구와 사회세력에 대한) 수평적 석명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고 개혁과정의 정책적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서로 경쟁적인 이익들을 협상과정에 끌어들이므로써 개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유도하고,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특정 이익의 지대추구의 기회를 축소할 때, 시민들의 희

생을 보다 용이하게 얻고 개혁에 대한 행위자들의 시계를 연장할 수 있다. 즉, 참여와 협의, 석명책임성 제고야말로 개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지속을 도우며 강한 개혁정부를 만드는 길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혁조치들의 논리를 일부 약화시키거나 비용을 증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포퓰리즘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수의 지대추구자들로부터 개혁의 지속성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개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경제위기가 진행 중일 때보다는 경제가 회생의 조짐을 보일 때인데, 그 이유는 국민들이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Przeworski, 1993, p.159). 한편으로는 개혁 과정의 초기 패배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개혁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의 과도기적 승리자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강화되면, 개혁은 불완전한 채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더욱이, 개혁의 초기 국면은 위기를 시급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과 과거의 제도나 전략이 실패했다는 점에 대한 ‘소극적 합의’(negative consensus)에 의해 전개되지만, 그 이상의 개혁의 진전은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적극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Nelson, p.51). 따라서, 개혁이 진행될수록, 참여와 협의에 의한 개혁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린쯔와 스테판도 지적하듯이 신자유주의자들처럼 경제개혁을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성의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우는 것”(Linz and Stephan, p.435)으로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개혁 정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경제사회’도 구현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전략은 이행과정의 복잡성, 역사적, 사회적 배태성을 무시하고, 단선적이면서 실행가능하지 않은 처방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걸음마 단계의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마저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전략은 탈공산주의 이행에 대한 스타크 등의 신제도주의적 연구와 웨보르스키, 헬만, 번스 등의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 대안적 관점은

신자유주의의 이분법적 사고 경향을 지양하고, 실용성과 다양성을 중시한다. 무엇보다도, 대안적 전략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탈공산주의 이행에 대한 윈-윈 전략이 가능하며, 참여적, 협의적 개혁 스타일은 이 윈-윈 전략의 요체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자체를 민주적 과정에 종속시키는 것이야말로, 비록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의 순수성은 일부 훼손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지향적 개혁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참고문헌

- 이재열. 『경제의 사회학: 미시-거시 연계분석의 이론과 방법』. 서울: 나남출판, 1996.
- 임경훈. 「바우처 사유화의 논리: 러시아와 체코의 경우 비교」, 『국제·지역 연구』, 제6권 3-4호(1997, 가을-겨울호).
- _____. 「러시아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연구논문 99-11.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Bunce, Valerie. "Regional Differences in Democratization: The East Versus the South",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3(1998), pp.187-211.
- Brada, Josef C., and Inderjit Singh. *Corporate Governance in Central Eastern Europe: Case Studies of Firms in Transition*. Armonk: M. E. Sharpe, 1999.
- Chandler, Alfred, D.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7.
-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1937), pp.386-405.
- Diamond, Larry, and Marc C. Plattner.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5.
- Fish, M. S. "Democratization's Requisites: The Postcommunist Experience,"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3(1998), pp.212-247.
- Geddes, Barbara.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Wisdom." Pp.58-73 in Diamond and Plattner, eds.
- Grabher, Gernot, and David Stark. "Organizing Diversity: Evolutionary Theory, Network Analysis, and Post-Socialism." Pp.1-32 in *Restructuring Networks in Post-Socialism: Legacies, Linkages, and Localities*, edited by Gernot Grabher and David Sta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Granovetter, Mark. "Economic Action, Social Structure, and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1985), pp.481-510.
- Hausner, Jerzy, Bob Jessop and Klaus Nielse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Institutional Dynamics in Transformation Process*. Aldershot: Edward Elgar, 1995.

- Hellman, Joel S.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 *World Politics*, vol. 50(January 1998), pp.203-234.
- Linz, Juan J., and Alfred Steph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6.
- Nelson, Joan M. "Linkage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Pp.45-58 in Diamond and Plattner, eds.
- Orru, Marco, Nicole Woolsey Biggart and Gary G. Hamilton.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ast Asian Capit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1997.
- Pereira, Luiz Carlos Bresser. "Economic Reforms and Economic Growth: Efficiency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In Pereira, Maravall, and Przeworski.
- Pereira, Luiz Carlos Bresser, Jose Maria Maravall, and Adam Przeworski. *Economic Reforms in New Democracies: A Social-Democra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 _____. "Economic Reform,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Institutions: Poland in the Eastern European Perspective." In Pereira, Maravall, and Przeworski. 1993.
- Schmitter, Philippe C., and Javier Santiso. "Three Temporal Dimensions to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9, no. 1(1998), pp.69-91.
- Stark, David, and Laszlo Bruszt. *Postsocialist Pathways: Transforming Politics and Property in East Central Europe*. Manuscrip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8.
- Stark, David. "Path Dependence and Privatization." In *Transition to Capitalism?: The Communist Legacy in Eastern Europe*, edited by Janos Matyas Kovac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4.
-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1975.